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자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2. 25.(수) 조선비즈, 구직촉진수당 최대 360만원... SNS에 퍼진 ‘지원금 챙기기’ 꼼수

- “취업 목적 아니고, 돈 타 먹으려고 지원했으면 이렇게 하면 됨.” (중략) 구직자의 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제도가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지원금 챙기기’ 수단으로 공유되고 있다. 취업 의지를 객관적으로 가려내기 어려운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략)
- 제도를 이용했던 직장인 김모(27)씨는 (중략) “소개해 주는 기업들도 맞춤형이라기보다는 대부분 구직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곳이었다”고 했다. 컨설팅 업계 관계자 역시 “(중략) 개인의 역량이나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는 방식의 컨설팅이 효과적일지 의문”이라고 했다.

2. 설명 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생계안정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제도로써, '21년부터 저소득 구직자·청년 등 162만명을 지원하여 왔음
- 참여자들은 상담사와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구직활동 이행이 확인되면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하여 왔음
- 구직활동으로는 일경험, 직업훈련, 구직기술 컨설팅 외에도 개인에게 필요한 입사지원·면접, 자격시험 응시 등 다양한 활동을 인정하고 있으며,
 - 이러한 활동을 수행한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지원금을 지급 중

- 단순·반복적 이력서 제출, 서류합격 후 면접 미응시 등 취업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형식적 활동은 구직활동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제도의 취지와 달리 지원금 수급을 목적으로 하는 참여에 대해서는 안내·점검을 강화하고, 참여자들의 구직의욕 고취를 위해 노력하겠음
- 아울러, 전담 상담사의 AI 상담 도구 활용 확대 등을 통해, 개인의 역량과 상황에 맞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것음

담당 부서	고용서비스정책관 국민취업지원기획팀	책임자	과 장	김현아 (044-202-7190)
		담당자	사무관	최원석 (044-202-7193)

